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21면	코로나 이후 道-연해주 협력 활성화 토론회	1
강원도민일보	02면	'인력양성 요람' 반도체 교육센터 원주서 문열어	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	2
江原日報	11면	원주권 도의원 8명 성명 “ 특수교육원 입지 재선정 ”	3
강원도민일보	03면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	4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총회	5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핵심 가치 표현 문구 오는 20일까지 ...	6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도정질문 GJC 현안 쟁점 전망	6
江原日報	10면	‘ 교육도시 춘천 ’ 기관 단체 거버넌스 구축	7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군 도비확보 도의원 협의 · 지원 요청	8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연구원 오늘 '산업 · 의료 분야 특례' 세미나	8
 KBS 춘천	온라인	강원은 폐쇄, 경북은 기능 강화... ‘ 러시아 본부 ’ 어떡하나	9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원도소방본부 119안전지킴家 1호 지정식	10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전대 투표율 53% 역대 최고... 결선 투표여부 촉각	10
江原日報	02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동해바다 보이도록 설계"	11
江原日報	01면	'반도체 클러스터' 중장기 육성전략 나왔다	12
江原日報	01면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신호탄 쏘아올렸다	13
江原日報	02면	원주서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키운다	13
江原日報	04면	서울대 진학생 44명 ... 수도권 쏠림 여전	14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저개발 지역낙후-저성장 물가상승' 악순환	15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거주 불명 취약계층 897명... "생활밀착형 발굴 병행 ...	15
江原日報	04면	공중보건의 120명 전역 '의료대란' 비상	16
강원도민일보	17면	속초 대포동 주민 "트램 도입 교통정체 해결"	17
강원도민일보	15면	횡성 공근면 주민 "동의없는 호국원 유치 철회"	17
江原日報	10면	춘천 소양8교 국비 확보 여부 주목	18
강원도민일보	05면	'삼척 20.9도' 봄기운 가득한 강원 오늘 영동 낮 최고기온 2...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요양원 급증세 지자체 대응 필요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향토은행 설립 호기 맞았다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용문~홍천 철도 예타, 올해 꼭 이뤄져야 한다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전국이 불쏘시개 … 봄철 산불 철저히 대비해야	22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인물 21면



코로나 이후 道-연해주 협력 활성화 토론회 코로나 이후 강원도-연해주 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6일 강릉 도환동해본부에서 권혁열 도의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제1강릉포럼, 동북아포럼, 강릉원주대 환동해북방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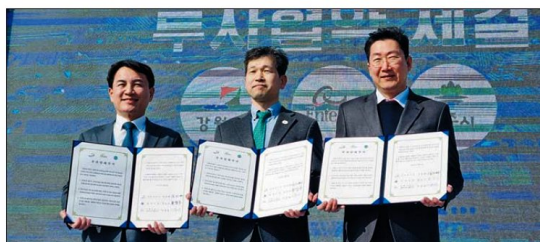
종합 02면

‘인력양성 요람’ 반도체 교육센터 원주서 문열어

도·원주시, 개소식·투자협약식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맞춤형 교육
“반도체 대기업 원주 유치 전진”

반도체 교육센터가 6일 원주에서 문을 열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날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 및 인테그리스코리아와의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강원도와 원주시는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반도체 부품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도·시의원, 도내 대학 및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 교육센터는 공정분석장비를 구축해 설계과정부터 제작, 패키징 등

후공정 과정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반도체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026년 국비, 지방비 등 460억원이 투입되는 센터 설립 전까지 원주벤처공장에서 임시 운영된다.

개소식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부품 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대표이사 웅키언코크)와 도, 원주시 간 투자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이번 협약으로 원주 문막공장 추가 증설을 추진기로 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국내 유일무이한 반도체 인력 육성기관으로 키우겠다”며 “인력 양성

과 더불어 기업유치를 위해 원주에서 교육, 공정, 테스트(시험·검사)까지 한 번에 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반도체 교육센터가 앞으로 원주는 물론 강원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부족한 반도체 설계 분야 인력 양성이 기대된다”고 축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도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뜻을 모아 이번 반도체 교육센터를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나아가 반도체 대기업 원주 유치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해민 khm29@kado.net

[포토뉴스]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이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김진태 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송기현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장,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주) 투자협약 체결식이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김진태 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이홍세 인테그리스코리아 사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에서 김진태 지사가 개회사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이 환영사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지역 11면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등 원주 도의원 8명 전원이 6일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강원특수교육원 재선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주=허남윤기자

원주권 도의원 8명 성명 “특수교육원 입지 재선정”

【원주】속보=강원도교육청의 강원특수교육원 입지 선정 발표(본보 지난 2일자 1면·3일자 17면 보도)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원주권 도의원 8명 전원은 6일 원주시청에서 “강원특수교육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김기홍 부의장과 박길선 교육위원장,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정 과정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뒤집은 신경호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3면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 창립총회가 6일 도의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

**도의회 의원 구성, 회장에 박기영
지원방안 마련 국가정책 반영 목표**

속보=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수물민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본지 3월6일자 11면 등)되는 가운데 춘천·화천·인제·양구 등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를 연구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연구회가 발족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 창립총회가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회를 통해 소

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주변지역 피해 분석과 지원방안을 마련, 나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연구회는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 김희철, 박대현, 박찬흥, 엄윤순, 이무철, 이승진, 임미선 도의원 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춘천, 인제, 양구, 화천 등 소양강댐 주변지역이 받은 피해로부터 자유롭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정치

[포토뉴스]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총회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총회가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장인 박기용 의원을 비롯한 춘천, 인제, 화천, 양구 지역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총회가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장인 박기용 의원을 비롯한 춘천, 인제, 화천, 양구 지역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총회가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장인 박기용 의원을 비롯한 춘천, 인제, 화천, 양구 지역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핵심 가치 표현 문구 오는 20일까지 공모

강원도의회가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문구를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슬로건 및 의정 방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 방향 및 핵심가치를 20자 내외 문구로 표현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

으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도의회와 심사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angwon.kr)에 발표된다. 최우수작 입상자(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300만원, 우수작 입상자(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장려작 입상자(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3면

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도정질문 GJC 현안 쟁점 전망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가 7일 개회하는 가운데 올해 첫 도정질문이 실시된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부터 환매하려던 중도부지를 포기하는 건도 심의가 예정돼있어 이번 회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 제31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14~16일까지 3일간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는 9일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을 심의한다. 강원도가 레고랜드발 보증채무 2050억원을 상환하며 환매하려던 GJC 중도 부지를 포기하고, GJC가 직접 채무상환을 이행하는 안이다. 하중도 부지를 비롯해 여기에 투입된 직·간접 기반비용이 40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지역 10면

‘교육도시 춘천’ 기관 단체 거버넌스 구축

선포식·포럼 성황리 개최

【춘천】‘교육도시 춘천 선포식’ 및 ‘교육도시 포럼’이 6일 스카이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를 비롯해 교육청·대학 등 교육 관련 기관장, 강원도,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춘천시 학부모회연합회 등 각계각층이 함께해 교육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행사에는 허영 국회의원, 최

양희 한림대 총장,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병규 부교육감, 최영재 시 교육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정재웅·박기영·김희철·박관희·양숙희·이무철·임미선·이승진 도의원, 김보건·이희자·김운기·남숙희·권희영·나유경·박노일·유홍규·이선영·지승민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장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지역 17면



고성군 도비확보를 위한 도의원과의 간담회가 6일 군청에서 함명준 군수, 김용복·이지영 도의원, 군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성군 도비확보 도의원 협의·지원 요청

함명준 군수 주재 간담회 열려

고성군 주최 '도비확보를 위한 도의원과의 간담회'가 6일 군청에서 함명준 군수, 김용복·이지영 도의원, 군청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함명준 군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군은 제1회 추경에 앞서 부서별 현안과제를 도의원에게 건의하고 예산편성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활동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실·

국·과장들은 간담회에서 총 28개 사업(403억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봉포리 청년상마당복합센터 건립,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 화진포 관광지(현내) 편의시설 조성, DMZ생태체험 무빙워크 설치, 고성쥬스브랜드 육성사업지원 등이다.

함 군수는 "앞으로도 도의원과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군정 핵심 현안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하겠다"며 "군정발전을 위해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군정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산 jisa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인물 23면

강원연구원 오늘 '산업·의료 분야 특례' 세미나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7일 연구원 민주홀에서 '산업·의료 분야 특례'를 주제로 강원연구원 릴레이 분권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산업·의료 분야의 특례를 중심으로 개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한림대의예·의학과 교수, 양명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장,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지은

강원은 폐쇄, 경북은 기능 강화... '러시아 본부' 어떡하나



[앵커]

최근 강원도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운영해온 현지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국제항로가 있는 동해시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연해주사무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이 북방 교역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폐쇄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항을 기점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을 잇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입니다.

강원도 유일의 정기 국제항로인 이 카페리를 통한 대 러시아 수출입 화물은 최근 1년 사이 80% 넘게 늘었습니다.

[홍 협/강원경제인연합회 사무처장 : "새로운 어떤 하나의 루트가 새롭게 정착되고 새롭게 개척되는 시기라고 보이는데, 이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한려 간 여객 운송도 재개되면서, 만 2천여 명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물류나 관광 분야의 향후 확대 가능성 등 북방경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2011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년 넘게 운영해온 '러시아본부'를 오는 6월 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2억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러시아본부에 투입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2019년 설치한 연해주사무소에 지난해 7월 사무관을 파견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포항-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항로 개설과 식품·화장품류의 수출 지원 등, 연해주사무소를 북방교역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최재석/강원도의회 의원 : "(강원도가)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나가 있던 본부를 전진기지를 철수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결정 아닌가...."]

강원도는 중국 지린성의 지사를 이미 폐쇄했고, 뉴욕의 미국본부도 올 상반기 정리할 예정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강원도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정면구

江原日報

2023년 03월 06일 (월)
사회

[포토뉴스]강원도소방본부 119안전지킴家 1호 지정식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이일)는 6일 춘천 신복읍 산천리에서 주진복 춘천소방서장, 박기영. 양숙희 도의원, 조덕교 춘천시 건축사협회장과 춘천한마음 로타리클럽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안전지킴家 1호 지정식을 개최했다.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3면

강원도민일보

국힘 전대 투표율 53% 역대 최고... 결선 투표여부 촉각

1차 과반득표 없을시 1·2위 경합
오늘 모바일 미참여자 전화투표
내일 일산킨텍스 투표결과 공개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이 나오면서 강원도내 여권이 결선 여부 예측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차 전당대회 3일차인 6일까지 전체 선거인단 83만 7236명 중 44만 4833명이 투표에 참여해 누적 투표율이 53.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5일 실시된 모바일 투표율(47.51%)과 이날 시작한 모바일 미참여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

이같은 높은 투표율의 배경으로는 1차 투표 이후 과반 득표자가 없을시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등 네 명의 후보가 각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점도 거론된다.

강원도내 각 진영은 각 후보의 결선 진출을 자신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 강원도 선대본부장을 맡은 이기찬 도의원은 6일 "김 후보가 과반을 넘겨 1차에서 선거가 끝날 것"이라며 "100만 당원들은 안정적인 국가경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하고 있다. 높은 투표율은 이런 마음이 집약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를 지원해온 박현식 전 국민의당 강원도당위원장은 "높은 투표율로 어느 한 명이 투표율 50%를 넘기는 독주가 어렵게 됐다"며 "결선에 가

면안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후보만으로는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당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천하람 후보 지지를 표명한 강대규 전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천 후보가 결선에 오를 것"이라며 "김기현 후보의 방식이 당원협의회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라면, 천 후보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높은 투표율은 자발적으로 투표한 당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7일까지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ARS 전화투표를 이어간다.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일인 오는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공개된다.

50% 득표자가 없으면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실시해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2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동해바다 보이도록 설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6일 강원도청 기
지실에서 목줄 형태의 산양 GPS 추적장
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태 지사 간담회에서 밝혀
산양 GPS 추적장치도 공개

연내 착공하기로 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동해 바다가 보이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일 기자들
과 만난 자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
블카에서 동해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색-끝정
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노선이 동해

바다를 조망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동해 바다를 조망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
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
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
경부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상부정
류장이 애초 계획보다 50m 아래로
조정되는 등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
다”면서도 “어렵게 환경영향평가에
서 승인을 받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설계를 충실히 잘하면 많은 국민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무게 400g, 목줄 형
태의 산양 부착용 GPS 추적 장치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절벽에 기어올라도 산양을
잡기 어려울 뿐더러 산양에 이 장비
를 채우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환
경부가 요구한)산양에 일일이 GPS
를 부착하는 것은 강원도와 양양군
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CCTV를 설
치해 산양의 분포를 조사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공

사하기 전, 공사 중, 공사 후에도 지
속적으로 면밀한 생태모니터링을 거
쳐 결과를 환경 당국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
립공원 오색-끝정 해발 1,430m 지
점, 3.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
하부정류장 및 산책로, 중간지주 6개
가 건설된다. 8인승 곤돌라 53대가
초속 4.3m 편도 15분의 속도로 운
행하며 시간당 825명의 관광객을 수송
할 수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1면

‘반도체 클러스터’ 중장기 육성전략 나왔다

원주교육센터 개소·투자협약
도 단계별 발전 로드맵 발표
“소부장·파운드리 연내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목표

김진태 강원도정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을 개최한 강원도와 원주시는 반도체 산업 유치·육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첫 모델인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성공시킨 기세를 몰아 올해부터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부론국가산단에는 부품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주 일원에 기업혁신파크를 신규 지정해 파운드리(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기업을 유치,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구로 육성한다.

2단계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로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받는 단계적 전략을 세웠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이전하거나 생산시설 신·증설 등의 추가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최대 154억원, 창업 시 최대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취득세(35~75%), 재산세(60~75%) 감면도 검토 중이다.

도는 전국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이 중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1,046곳을 선정,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반도체 교육센터의 운영계획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올해 확보한 국비 200억원으

로 반도체 공정·교육장비를 올해 안에 도입, 이날 임시로 마련한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우선 활용하고,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260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원주시 일원에 반도체 교육센터를 새로 건립, 이전할 예정이다.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5월 정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8월까지 심사

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11월 착공, 반도체 교육의 핵심이자 기본적인 공간인 클리프를 2025년 8월 우선 준공한다. 반도체 교육센터는 2026년 6월부터 전면 가동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와 1호 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신호탄 쏘아올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이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김진태 지사, 송기현 국회의원, 원강수 원주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원주시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키운다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 글로벌 기업과 투자협약도

강원도와 원주시가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뒀다.

반도체 교육센터의 개소식 및 글로벌 반도체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주)와의 투자협약식이 6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열렸다. 반도체 교육센터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공공형 종합 교육기관이다.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은 물론 권역별 반도체 공공연구소 유치, 기술 지원, 기업 지원 등으로 반도체 교육·실습의 핵심 거점기관 역할을 한다. 또 이날 자리에서 도와 원주시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김진태 도정의 제1호 반도체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송기현(원주) 국회의원, 원강수 원주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 도의원,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조창진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허인구 G1 사장,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교육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인 글로벌 반도체 도시의 핵심인 만큼 국내 유일 무이한 공적 반도체 인재 육성의 장소로 만들겠다”며 “교육기관에 이어 테스트베드까지 구축한다면 반도체

대기업 유치도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원 시장은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와 투자 협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나아가 반도체 기업 원주 유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교육센터를 더욱 크게 육성하는 데 원주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 교육센터가 국내 부족한 반도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원주에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원주와 강원도에서 나아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김설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사회 04면

서울대 진학생 44명 ... 수도권 쏠림 여전

2023학년도 대입 결과

전체 15.7% 수도권 대학 입학
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영향
의학계열 75명 선호 현상 뚜렷

2023학년도 대입 결과 강원지역에서 44명이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선발제도가 확대되면서 강원지역에서도 수도권 쏠림과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강원도교육청은 6일 도내 84개교 1만528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23학년도 대입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대는 수시 40명, 정시 4명 등 총 44명이다. 연세대 40명, 고

려대 61명, 서강대 14명, 이화여대 45명, 포항공과대 16명 등 서울 주요 7개 대학 및 특수목적대에 총 330명이 진학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요대 진학자 수는 736명으로 강원 학생의 1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선발제도 확대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예년보다 상위권 학생들의 수도권 진학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계열의 강세도 이어졌다. 이번 대입에서 의대 진학자는 44명, 치대 9명, 한의대 6명, 약대 16명 등 75명이 등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3명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의대에, 1명은 특목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경쟁률이 낮아진 교대 진학자는 79명이다.

강원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강원대(춘천) 1,091명, 강릉원주대 632명, 한림대 485명, 가톨릭관동대 279명 등 3,641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강원도 학생의 대학 등록률은 80.3%였으며 4년제 진학자 가운데 92.5%가 수시로, 7.5%가 정시로 합격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을 향해 "대학서열화 체제를 강화하고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선영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1면

강원 '저개발 지역낙후-저성장 물가상승' 악순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국 최고
도내 공공요금 인상 직격탄
가스·수도 등 인프라 부족 탓
자영업 비중 큰 산업구조도
물가 상승 예민하게 즉각 반응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3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몇 년째 전국 최고치를 찍고 있는 도내 물가상승률은 수도와 가스 등 강원도의 낙후된 사회인프라와 자영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원인이라는 점에 서 저개발이 저성과 물가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이 당분간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2월 강원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4(2020년=100)로 지난해(106.04) 동월 대비 5.3%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원 지역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 2021년은 2.8%(2020년 0%기준)로 2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

강원지역이 상승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타 시·도 대비 열악한 경제인프라와 산업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지역은 가스와 수도 등 사회인프라망이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지역낙후도 순위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DI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행안 연구(2020)

지 역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순위(2월)	지역낙후도 순위
강원도	1	16
전라북도	2	13
광주광역시	2	2
충청남도	3	12
경상북도	3	15
충청북도	3	11
전라남도	4	17
대구광역시	5	7
경상남도	5	10
경기도	5	6
서울특별시	5	1
제주특별자치도	6	14
인천광역시	6	5
울산광역시	6	8
세종특별자치시	7	9
대전광역시	7	4
부산광역시	7	3

부족, 공공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률이 27.6%나 큰 폭으로 상승, 관련 통계 작성 시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난방 등에 사용되는 등유(26.0%)와 전기요금(29.5%), 도시가스요금(33.2%) 인상 폭이 컸다.

이는 지역 낙후도와도 직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당시 발표한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를 보면 강원지역의 낙후도 순위는 16위로 전남(17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2위인 전북(5.1%)에 이어 충남(5.0%), 경북(5.0%), 전남(4.9%) 등도 낙후도 지수에서 12~17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역의 높은 연세 소상공·자영업자 비중도 물가에 민감한 경향을 드러냈다.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 비중은 24.1%로 서울(16.3%)보다 7.8%p 많았다. 이로 인해 물가인상의 직격탄을 이들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맞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도내 생활물가·신선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각각 5.7%, 5.5% 등 상승세를 보였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고 공공서비스, 일반서비스 비중이 높아 물가 상승에 타격을 크게 받는다. 산업구조가 개편된다면 지역 낙후 정도를 보다 더 극복할 수 있고 물가 상승에도 지 금보다 덜 영향 받을 수 있다"며 "산업

구조개편과 재정·금융정책,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한 규제 완화 등으로 강원 경제 인프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황선우 woo6745@kado.net](mailto:woo6745@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종합 04면

도내 거주 불명 취약계층 897명... "생활밀착형 발굴 병행 필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간의 일치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인원이 강원도내에서만 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복지취약계층 세대와 사망의심자 세대 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 또는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897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지역별로 원주가 24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춘천 135명, 강릉이 91명으로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우려가 높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험감지해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제외되는 인원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위험 감지 지원체계와 병행하면 사각지대 발굴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훈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사회 04면

공중보건의 120명 전역 ‘의료대란’ 비상

전체 292명 중 41% 이달 전역
충원 어려워 의료진 공백 우려
청년인구부족 겹쳐 대책 시급

강원도 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20명이 이달 말 한꺼번에 전역하게 되면서 강원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역을 앞둔 공중보건의 120명은 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공중보건의 292명의 41%에 해당한다. 하지만 120명의 공중보건의가 빠져나간 후 이들의 자리를 채워 줄 신규 공중보건의는 줄어든 것으로 보여 의료 대란도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보건소를 비롯해 의료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서 근무해 온 120명의 공중보건의가 26일부터 4월5일 사이에 전역한다. 도는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 배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올 2월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복지부의 사정으로 인해 관계자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더욱이 공중보건의 징집 대상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의사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역으로 빠져나가는 120명의 빈자리를 모두 채우기 힘들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료인력 부족으로 농촌지역

공중보건의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복무기간이 3년인 공중보건의 대신 1년6개월인 일반병으로 병역을 해결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등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속초의료원은 당장 마취과 공중보건의사가 전역을 앞두고 올 2월부터 조기 휴가에 들어가면서 이미 일부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수술을 위해서는 외과의 사뿐 아니라 마취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필수적이지만, 지역에서는 필

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홍천의 유일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홍천아산병원도 2020년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던 유일한 공중보건의가 오는 26일 전역한다. 추가 인력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각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배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지역 17면

속초 대포동 주민 “트램 도입 교통정체 해결”

시민 간담회에서 대책 마련 요청
노면전차·주차장 확충 등 요청
시 “공공 교통수단 마련 검토”

속초대포동 주민들이 고질적인 교통
정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트램 도
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속초시는 6일 대포동 도농융합전
수관에서 이병선 시장과 시청 국·과
장, 대포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 공동 현
안인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과 대포동 지역 현안인 ‘설악동
사계절 힐링 관광 인프라 조성’, ‘중
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
한 설명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
다. 이 자리에서 대포동 주민들은 설
악산 소공원~설악동 B·C지구를 잇
는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과 대
포항 1주차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염상호설악동변영회장은 “단풍철

성수기만 되면 설악동 일대가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트램 도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또한 C지구로의 관광객 유
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목우재~소공
원~설악동 C지구를 일방통행화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현대포변영회장은 “대포항 1
주차장이 인근 대형호텔 투숙객들로
만차에 이를 정작 상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주차를 할 곳이 없다”며
“현재 건설중인 또다른 호텔이 문을

열게 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선 시장은 “현재 강
원도에서 속초 등 4곳의 도시에 트램
도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주차난은 대포항만이 아닌 속초 전
역의 문제로 대체공공교통수단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소통간담회는 오는 8일
까지 사흘간 8개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박주석 jooseok@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지역 15면

횡성 공근면 주민 “동의없는 호국원 유치 철회”

반대추진위원회 주민결기대회
자료 공개 등 밀실행정 해명 촉구
군 “지역경제 효과”추진 의지

국립강원호국원 건립예정지로 내정
된 횡성군 공근면 주민들이 주민 동
의없는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전·현직 군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횡성 호국원유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고광수)는 6일 오후 횡성군
청 앞 광장에서 ‘국립강원호국원 유
치 반대 주민결기대회’를 갖고 투명
한 유치과정 자료공개와 유치철회를
요구했다.

반대추진위는 이날 오전 본집회에
앞서 횡성읍 전역을 돌며 ‘호국원 유



횡성 호국원 유치반대 주민결기대회가 6일 오후 횡성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호국원 유치철회를 촉구했다.

치반대’ 차량시위를 벌인 데 이어 호
국원이 들어설 예정인 공근면 덕촌
리, 매곡리, 오산리, 수백리 일원 주
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공모절차를 무시한 호국원 유
치 결사반대’를 외쳤다. 주민들은 고

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4명
의 삭발식에 이어 군청 정문 앞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

고광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강
원도·횡성군에 호국원 유치사업 선
정 관련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열람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밀실행
정이 입증된 만큼 공모사업을 추진한
전·현직 군수의 해명과 주민소환운
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성토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횡성호국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역
사교육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며 “호국원 유치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유치한 결과로 공근면을 중심으
로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사업추진의지를 밝혔다. 국가보훈
처에서 추진하는 국립횡성호국원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모
두 433억원을 들여 덕촌리 일원 40만
㎡ 부지에 봉안시설 2만기 규모로 조
성될 예정이다. 박창현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지역 10면

춘천 소양8교 국비 확보 여부 주목

접경지역 신규사업 신청 ... 선정 시 759억 확보 가능

【춘천】춘천시가 소양8교 건설 사업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다. 최종 결과는 올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소양8교 건설사업이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만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춘천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군사안보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체 사업비 1,085억원 중 70%인 759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량까지 시비로 건설할 경우 준공 시기가 2030년으로 예상됐지만,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보다 2~3년 정

도 앞당길 수 있어 빠르면 2027년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소양8교 건설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기호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소양8교는 지난해 12월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춘천시는 올해 설계 등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인 소양8교 건설 사업은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20년 도시계획

시설이 실패했다. 그러나 시가 2021년 2월 강북지역의 상습 정체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소양8교를 전액 시비로 재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노선이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시도(市道)라는 점에서 그동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올 2월 행안부의 실무부서에서도 소양8교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했었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사설/칼럼 19면

요양원 급증세 지자체 대응 필요

-업무정지 대책부터 마을공동사업까지 사안 다양다중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사회 05면

‘삼척 20.9도’ 봄기운 가득한 강원
오늘 영동 낮 최고기온 21도 예보

6일 강원도 일부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을 기록, 울들어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최고기온은 삼척 20.9도, 강릉 20.6도, 동해 19.4도 등을 보였다.

영월 16.9도, 평창 16.7도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울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햇볕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7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2~3도, 영동 7~11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17~19도, 영동 17~21도로 예보됐다.

김정호 kimjho@kado.net

강원도내 시·군별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기반 시설로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상가, 도심과 농산촌 등을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정책이 시설의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난 다각적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5년 새 24%p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현행법상 노유자시설에 속해 용도 변경이 쉬워 어린이집이 줄어든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서 다양다종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환수 조치는 물론 업무정지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애꿎은 입소자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월군의 한 노인요양원은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정하게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소자 30여명이 충북으로 옮겨야 했고, 지역의 노동자들은 이직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춘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정수급한 시설에서 행정소송 등으로 고의로 늦출 경우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설 간 긴

뢰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동해시 등 여러 지역주민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치매노인을 단기간 돌봐줄 시설이 없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업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업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공적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화재 발생 시 어느 곳보다 종사원의 빠른 대처와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곳도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 급증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마을주민 공동수익사업으로 올 7월 노인요양원을 개원하고 직접 운영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산동과 남향진동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배부되는 특별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시설 이용을 통한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요양원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의제를 던지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증가세에 지자체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7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원 향토은행 설립 호기 맞았다

-과점 폐해 차단신규 인가전망... 도민 응집력 필요

금리상승기은행이자 부담으로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시중은행들이예대금리차율이용해막대한이자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은행들은이자수입을 바탕으로 희망 퇴직금과 성과급을 대폭 올리는 등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몇몇 은행의 시장 과점으로 인해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정부와금융당국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에 힘입어강원지역향토은행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금융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은행 설립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 과점화는 1997년 외환위기가 계기가 됐습니다.부실은행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으로 26개에서 10개 안팎으로 줄었습니다.이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과점 현상이 굳어졌습니다.이들은행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여신시장 71.4%, 수신시장 63.4%에 달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분석입니다.

과점에 따른 폐해가 도마 위에 오르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

과비은행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중점내용은시중은행의디지털화에 따른 지역 점포 축소 등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또한당국의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면 저축은행을향토(지방)은행으로,향토은행을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저축은행의 지역은행 전환이 이뤄진다면 현재 향토은행이 없는 강원과 충청지역에서도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특히강원지역은별도지역은행이없고,현재저축은행 권역도대구·경북·강원으로 묶여 있어 은행 설립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이번제도 개선이 실행될 경우 지역은행이시중은행으로 전환돼 영업권역 확장도가 가능합니다.전국 영업망을 가진 은행으로,타 은행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향토은행 설립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전국적인은행으로성장할 제도적 기반도 갖춰질 전망입니다.더구나강원도는특별자치도출범을 앞두고 지역 자본을 키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강원의 금융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지역은행 설립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입니다.도민들이 응집력을 발휘한다면,조기에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사설/칼럼 19면

용문~홍천 철도 예타, 올해 꼭 이뤄져야 한다

용문~홍천 철도 건설사업의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산됐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문~홍천 철도 예타 조사의 최종 확정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 착공만이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용문~홍천 철도의 예타 조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간단체 중심의 홍천 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용문~홍천 철도의 착공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6월 중 개최하기로 긴급히 결정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의 조기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홍천은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달지 않는 곳이다. 철도는 지역의 문화·경제·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홍천은 강원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1,820㎢)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철도가 지나가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용문을 잇는 철도는 65년 전인 1956년에 놓였다. 하지만 홍천까지 연결하는 34.2km 구간은 수십 년째 지역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용문~홍천 철도는 춘천~홍천~횡성~원주~양평~서울~청평~춘천을 잇는 내륙 순환 철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개발의 축에서 벗어나 있던 영서 내륙의 교통망을 확

바꿀 수 있다. 나아가 심각한 주택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의 인구 분산과 부동산 가격 진정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통령 공약인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 가치가 더 높다. 용문~홍천과삼척~강릉, 동해 신행선, 원주연결선 철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2030년까지 개통된다면 경춘선 ITX와 강릉선 KTX를 시작으로 동해북부선 강릉~제

진 및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과 함께 강원도가 수도권의 배후 광역경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당시 기대가 컸다. 용문~홍천 철도는

국토부 올 상반기 아닌 하반기 신청 검토

지역 주민 조기 착공 치질 우려 강력 반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활 걸어야

반드시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문~홍천 구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예타 조사 대상 포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용문~홍천 철도는 강원도의 1순위 사업이다. 조기에 건설되면 강원도는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등 소득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부합된다. 사업의 조기 착공 당위성을 정부에 인식시켜 올해 예타 조사 포함이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역시 당장 드러나는 비용과 효과를 뛰어넘는 요소들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07일 (화)

사설/칼럼 19면

전국이 불쏘시개 ... 봄철 산불 철저히 대비해야

전국이 불쏘시개다. 가뭄이 심각해 동시다발성 봄철 산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다. 윤 대통령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긴급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산불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전선주 누전, 방화,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2021년 산불 653건 중 179건이 입산자의 실화, 89건이 쓰레기 소각, 69건이 논밭 태우기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하지만 최근 10여년 실화자 검거율은 41%에 불과하다. 검거돼도 처벌은 솥방망이 수준이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거의 과태료나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다. 이러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각심 고취로 산불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

한 주의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은 초기 신속한 진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홀해선 안 된다. 산불이 꽃 소식보다 먼저 봄을 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3월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이어진 동해안 산불은 역대급 산불로 꼽힌다. 2000년 이후 2020년까지 강원도 대형 산불 27건 중 발생기간이 3일 이상인 산불은 7건이었다. 2022년 산불로 인한 강릉(1,485ha), 동해(2,735ha), 삼척(2,162ha)지역의 피해면적은 모두 6,382ha에 달한다. 강원도와 강릉, 동해, 삼척시는 지난해부터 국비 752억5,000만원과 지방비 333억7,000만원 등 총 1,086억원을 들여 복구를 진행 중이다.

삼척시를 포함해 50건의 복구대상 중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진 사업은 27건에 불과하다. 한번 산불이 난 지역은 복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때문에 산불 예방과 동시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뾰뾰한 소나무숲도 강원지역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나무를 솎아내 밀도를 낮추고 활엽수와 혼합해 심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산불을 기후위기 재난으로 간주하고 장비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대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